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10-03(통권 383호)
2010.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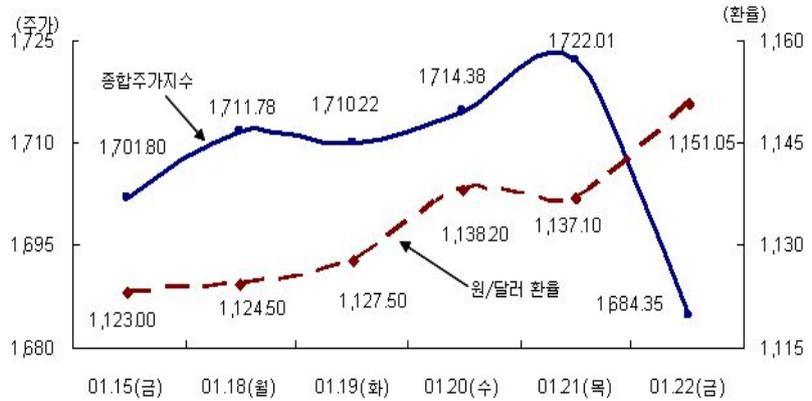


■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 민간 참여 확대와 역량 활용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5~1.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동 열 연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 전 선 형 연구 위 원 (3669-4131, s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을 제외한 非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역금융도 부진하며, 소득 격차와 주택가격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非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09년(1월~9월)의 신설법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으며,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 일자리 감소와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와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지역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95년 49.0%에서 '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충청권과 제주도는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9년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첫째,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例: 課稅 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PPP)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 '지역금융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

<p>지역경제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최근 5년간 어음부도율, 지방이 수도권의 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는 非수도권 0.64%, 수도권 0.12%로 5배 이상 격차 벌어짐 ▣ 2009년 9월말까지 신설법인 비중, 수도권 60.7% 非수도권 39.3% ▣ 지역금융의 위축: 은행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퇴출과 수도권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저축은행, 신탁의 지방점포: 11년간 각각 36.8%, 69.5% 감소 ▣ 금융연관비율: 2008년 지방은 1.07 서울은 3.08로 3배 가량 격차 ▣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니계수 '97년 0.085, '08년 0.194로 확대 ▣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 서울 36.2%, 동남권 8.2%, 제주권 -19.5%
-----------------------------	--

<p>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교육, 인구, 지방재정 4가지가 지역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 수도권의 비중은 '95년 49.0%에서 '08년 50.9%로 꾸준히 증가.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은 꾸준히 감소 ② 열악한 교육여건: 고등교육기관 35%, 사설학원 49%의 수도권 집중,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의 57%(17개)가 수도권에 소재 ③ 지방 인구 비중의 지속적 감소: 수도권 인구 비중 '92년 44%에서 '08년 49%로 계속 증가. 충청권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꾸준히 감소 ④ 취약한 재정자립도: 수도권과 지방 재정자립도 격차 9년간 더 확대
--------------------------------	---

<p>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정책수단 확대를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세수의 비중을 늘리는 등 과세자주권과 재정분권의 수준 제고 ② 지역특구 활성화 등 지자체 주도적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원 ③ 민관협력(PPP)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참여와 역량 활용 극대화 ④ 지역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지역금융지원법' 도입 ⑤ 지역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

I.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경제운용 방향에도 드러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체감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임

- 우리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景氣, 금융, 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 景氣 현황을 반영하는 어음부도율은 지방이 수도권 보다 크게 높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非수도권에 더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 5년간 어음부도율 추이를 보면, 非수도권이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08년에는 지방 0.64% 수도권 0.12%로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짐

< 최근 5년간 어음부도율 추이 >

(%)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국	0.18	0.14	0.11	0.11	0.15
수도권(A)	0.14	0.11	0.09	0.08	0.12
非수도권(B)	0.49	0.37	0.34	0.46	0.64
격차(B-A)	0.34	0.25	0.25	0.37	0.52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 2009년 신설 법인을 보면, 수도권이 非수도권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2009년(1월~9월)에 신설된 법인수를 보면 수도권이 60.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사업체 수 비중 46.8%보다 더 높아졌음

< 2009년(1~9월) 권역별 신설법인수 비중 >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60.7	8.2	9.6	7.0	11.8	1.9	0.8

자료 : 통계청, KOSIS 및 중소기업청, 통계DB

2. 지역금융의 위축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별 권역별 점포수 비중을 보면, 지방은행 및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들의 퇴출과 수도권으로의 금융집중을 드러내고 있음

- 아래 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1년이 지난 2008년 말 현재 일반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수도권 비중이 '9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일반은행의 非수도권 점포수가 같은 기간에 각각 36.8%, 69.5%, 40.1% 감소하여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기관별 점포수의 수도권 비중 >

(단위: 개, %)

	수도권			非수도권			수도권 비중		
	'97년	'08년	증감률	'97년	'08년	증감률	'97년	'08년	증감
일반은행	3,413	3,806	11.5	2,575	1,543	-40.1	57.0	71.2	14.2%p
상호저축은행	137	171	24.8	204	129	-36.8	40.2	57.0	16.8%p
신용협동조합	440	172	-60.9	1,226	374	-69.5	26.4	31.5	5.1%p
새마을금고	877	461	-47.4	1,866	1,057	-43.4	32.0	30.4	-1.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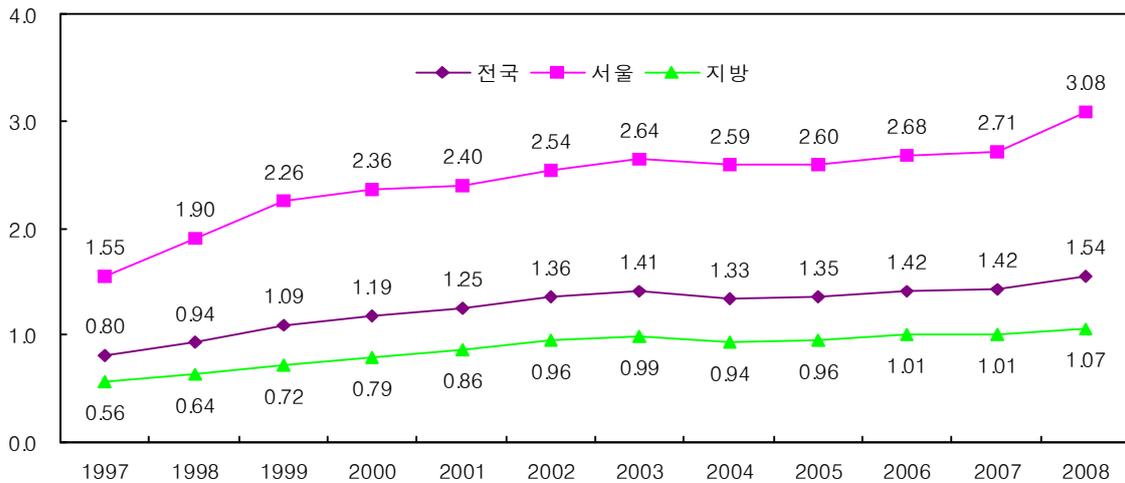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 금융기관 협회 홈페이지

○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금융의 기여도 및 지역 금융산업의 고도화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연관비율은 非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3배가량 낮아 지역의 낮은 자금축적 수준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08년 말 지방은 1.07, 서울은 3.08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2004년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에 있음
- 금융산업의 지역간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지방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이 시급함

< 서울과 지방의 금융연관비율 추이(예금은행 기준) >

(%)



자료 : 통계청, KOSIS 및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주 :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예금+대출금)/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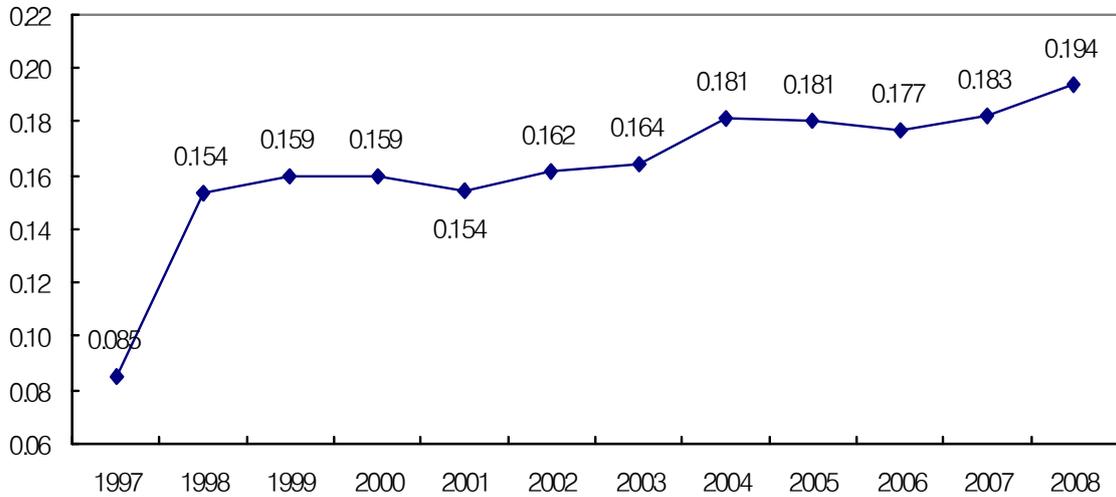
3.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를 활용하여 지역간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¹⁾를 계산해 본 결과 '97년 이후 2배 이상 커졌음

- 지니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0.085에서 '08년 0.194로 2배 이상 커졌으며,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97년과 98년 사이의 급격한 불균등도 증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도 지역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 지니계수 계산식. $Gini = \left\{ \frac{1}{2n^2\mu_t} \right\} \sum_{i=1}^n \sum_{j=1}^n |y_i - y_j|$, μ_t 는 시간 t의 평균소득, y_i 는 i지역의 소득, y_j 는 j지역의 소득을 나타냄.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가중변동계수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역간 불균등도의 심화를 드러냄

○ 주택가격상승률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 간 자산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 2004~2008년까지 5년간 권역별 주택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非수도권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제주도는 -19.5%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지역간 자산소득의 불균등도 역시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권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KOSIS

II. 지역경제 침체의 4대 원인

○ (일자리)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악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임

- 권역별 일자리 비중을 보면,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14년 동안 수도권 일자리의 비중은 49.0%에서 50.9%로 증가했으며, 충청권과 제주도는 비중이 증가했음
- 나머지, 호남권은 9.7%에서 9.3%로, 대경권은 10.8%에서 9.7%로, 동남권은 17.6%에서 16.4%로 각각 감소함
-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효과로 인해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권역별 연도별 취업자수 비중 추이 >

비중	1995	2000	2005	2008
수도권	48.97%	48.94%	50.42%	50.85%
충청권	8.97%	9.40%	9.54%	9.77%
호남권	9.67%	10.08%	9.29%	9.28%
대경권	10.83%	10.55%	10.15%	9.72%
동남권	17.55%	16.92%	16.57%	16.40%
강원권	2.97%	2.98%	2.88%	2.86%
제주권	1.04%	1.13%	1.13%	1.11%

자료 : 통계청

○ (교육) 고등교육기관과 사설학원의 수도권 집중, 지역별 거점대학의 미비 등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수한 교육여건'은 지방 인구의 서울 유출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고등교육 기관과 사설학원의 수도권 집중이 주로 영향을 미침
- 2008년 말 현재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소재 비율이 35%에 달하며, 이는 2000년의 36%와 큰 변화 없음
- 수도권, 非수도권 대학의 未충원률²⁾은 각각 1.2%, 13.2%('03년도)이며, 국내 100대 기업 취업률은 각각 9.9~13.5%에서 4.7~5.0%로 큰 차이('00~'03년)
- 2008년 말 현재 전국 사설학원의 48.8%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³⁾

2)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설훈 의원실)

3) 2008년 말 현재 전체 7만213개의 학원 가운데 수도권 44.8%,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18.9%, 대경권(대구,

- 2009년도 상위 30개 대학 중 17개(56.7%)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우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고급 인력의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짐

<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의 광역경제권별 소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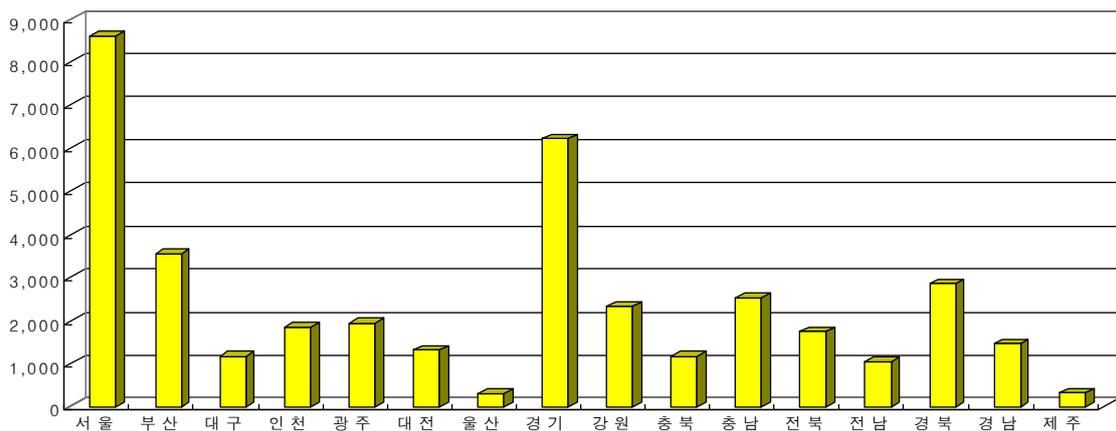
	2007년 평가	2008년 평가	2009년 평가
수도권	19개	18개	17개
동남권	3개	2개	3개
대경권	3개	4개	4개
충청권	3개	4개	3개
호남권	1개	1개	1개
강원권	1개	1개	2개
제주권	0개	0개	0개

자료 :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www.jedi.re.kr), 연도별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작성

- 지방 국립대학의 '지역거점대학화' 실패도 지방 인구의 유출에 기여함
 - 지방 국립대 중 상위 30위 대학은 4개에 불과하며, 10위권 대학은 없음4).
- 연간 약4만 명의 대학 편입생 가운데 43.4%(‘09년)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차지하고, 지방의 모자라는 학생을 동남아 유학생으로 메우는 새 패턴이 형성

< 시도별 대학편입생 현황 (2009) >

(단위: 명)



자료 : 교육개발연구원(www.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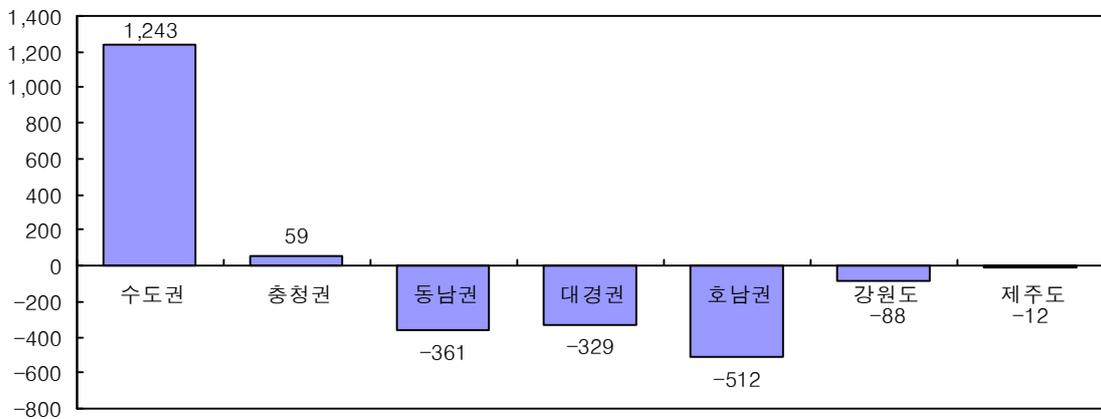
경북) 8.9%, 충청권 10.3%, 호남권 12.5%, 강원도 3.3%, 제주도 1.3% 소재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울산, 제주, 광주, 전북의 학원 비중이 인구에 비해 높아 이 지역의 교육열이 강함을 알 수 있음
4) 1980년대에 대학평가는 없었지만, 대학 입학생들의 입시 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위 10위권 내에 부산대, 경북대 등 2개 지방 국립대학이 있었음

○ (인구)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99년부터 '08년까지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됨

< 최근 10년간 권역별 인구 유입/유출 규모 >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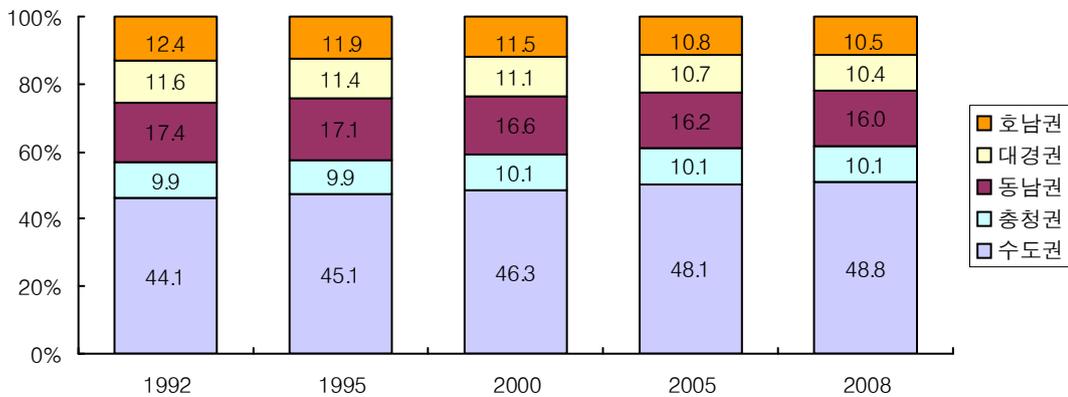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주 :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간 인구 유입과 유출 규모를 각각 +, - 숫자로 표시

-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지난 '92년 44.1%에서 '08년 48.8%로 계속 커져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지속적으로 감소

< 권역별 인구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각 년도

주 : 강원도는 3.5%(92년)에서 3.0%(08년)으로 줄었으며, 제주도는 1.1%로 불변

○ (재정)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⁵⁾ 격차는 벌어지고,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위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지 못함

-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지고 있음.
- 동남권은 20.3%p에서 25.6%p로, 대경권은 30.5%p에서 39.5%p로, 충청권은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벌어짐

< 권역별 재정자립도의 수도권 대비 격차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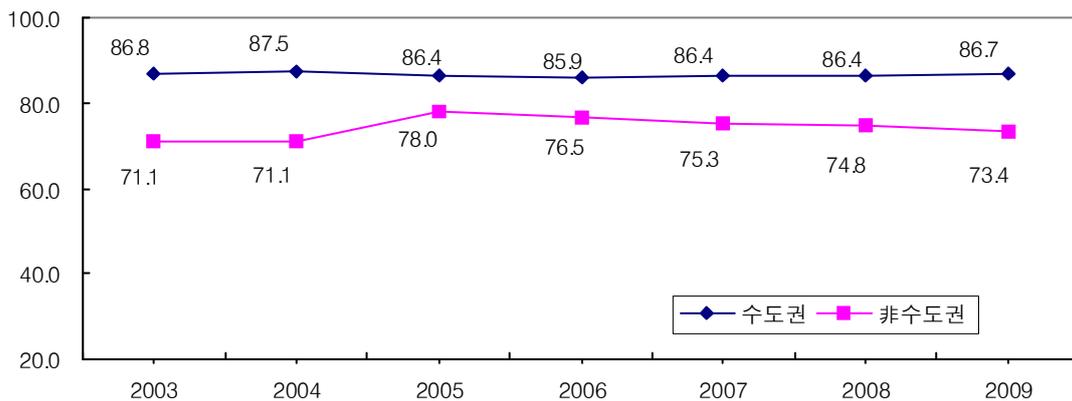
	2001	2003	2005	2007	2009
동남권	20.3	21.6	20.5	21.6	25.6
대경권	30.5	30.0	29.0	32.0	39.5
충청권	36.5	37.9	34.3	31.0	37.6
호남권	46.0	46.3	45.6	45.8	50.3
강원도	54.0	56.1	53.3	50.1	52.7
제주도	50.2	45.4	41.5	52.0	55.5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를 기초로 재작성

주 : 수도권 재정자립도[83.8('01), 82.8('03), 80.8('05), 78.4('07), 80.7('09)]에서 권역별 수치를 차감

-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주도 격차가 '03년 15.7%p에서 '05년 8.4%p까지 좁혀졌으나, 최근에는 격차가 다시 벌어져 '09년에는 13.3%p로 커졌음

<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각 년도

5) 재정자립도=[(세수입+ 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100, 재정자주도=[(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100.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더불어 비교적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중앙정부의 보조금까지 포함한 지표로서 2008년부터 활용되고 있음.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課稅자주권 등 정책수단 확대를 통해, 地自體長들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
 - 연방국가인 미국과 독일은 물론 단일국가인 일본, 스페인, 덴마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또는 재정분권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미국, 독일, 중국의 州知事나 省長은 재량권과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별 기업유치 행사를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우리나라 총 세입 가운데 지방세입의 비중은 17.4%로서 OECD 25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15위에 불과한 낮은 수준임

< 2005년 OECD 국가의 지방세입 비중 추이 >

(%)

독일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한국	연방국 평균	단일국 평균
48.6	45.4	33.3	18.2	23.9	40.0	45.7	44.2	5.8	17.4	29.0	13.6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National Account 2007 (김현아, '재정포럼', 2009년1월호 재인용)

주 : 지방세입/총세입

-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만, 지방소득세는 기존 주민세를 명칭 변경했고, 지방소비세는 기존 부가가치세의 5%를 할당받는 것으로서 지방에 순증되는 재원은 약1.9조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 향상 효과는 미미)
 - 지방소득세는 기존 '소득割 주민세'의 이름만 변경하고, 3년간 과표와 세율은 동일하므로 당분간 지자체나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도 3년간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5%(약2.4조원)를 전환하여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며, 2013년부터 부가세의 5%를 추가 전환할 계획

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0.1.12)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재정자립도는 2.2%p 증가

7)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있어서 광역단체별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가중치를 수도권 100%, 非수도권 광역시 200%, 非수도권도 300%로 차등 부여함

- 지방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21%에 불과하므로, 지방세의 비중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유인을 시스템적으로 부여해야 함
- 향후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기업유치 등 조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
-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는 점차 올리고, 부동산 취·등록세는 점차 내리는 방향으로 지방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중에서 5~10%만 전환할 계획이지만 차츰 전환비율을 과감하게 늘려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과 재정자립도 순위 >

(단위 : 억 원,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200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2009 예산기준)		
순위	시도	소비지출액	(비중, %)	순위	시도	재정자립도 (%)
1	서울	1,388,761	(27.1)	1	서울	92.0
2	경기	1,204,984	(23.5)	2	경기	75.9
3	부산	353,745	(6.9)	3	인천	74.2
4	경남	295,873	(5.8)	4	울산	67.7
5	인천	257,967	(5.0)	5	대전	59.3
6	대구	233,522	(4.6)	6	부산	58.3
7	경북	221,336	(4.3)	7	대구	54.7
8	충남	170,784	(3.3)	8	광주	48.3
9	대전	154,479	(3.0)	9	경남	39.4
10	전북	145,537	(2.8)	10	충남	36.6
11	전남	139,860	(2.7)	11	충북	33.3
12	광주	139,750	(2.7)	12	강원	28
13	강원	128,825	(2.5)	13	경북	27.7
14	충북	124,425	(2.4)	14	제주	25.2
15	울산	116,229	(2.3)	15	전북	23.6
16	제주	50,764	(1.0)	16	전남	19.4

자료 : 통계청, 통계포탈, e-나라지표, e-지방지표

주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2005년 기준가격으로 평가된 2007년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이며, 재정자립도는 2009년 각 시도별 평균자료이며 純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일자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지역 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

-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규제특례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의 지역특구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나 안착단계에 들어갔으며, 향후 규제특례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역량을 적극적 참여시킴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지역특구제도는 2004년9월 시행된 후 5년이 지난 현재 58개 법률에 관하여 126개의 규제특례가 등록되어 있으며, 129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시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

(단위 :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	3	3	3	2	8	8	14	14	12	21	24	11	2	129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2009)

- 49개 특구를 조사한 결과, 고용은 '06년 4,645명에서 '08년 22,006명으로 증가하여 2년간 374% 증가했으며, 각 특구별로는 354명이 증가함
- '09년 4월의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특구 제안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자체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힘든 '지역특화 사업'의 민간 주도 제안과 사업을 장려
-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민간의 특구계획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농업, 교육, 의료복지 등에까지 민간 기업이나 사회봉사단체, NPO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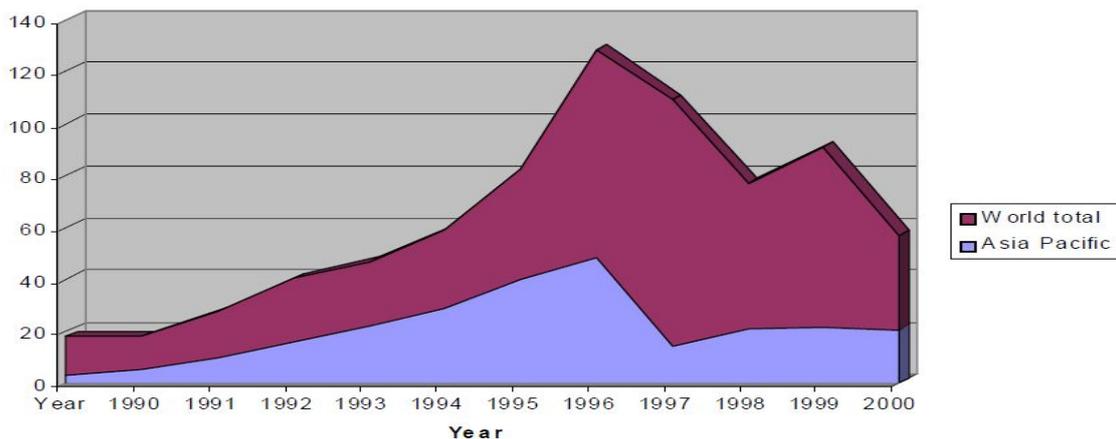
○ (민관협력 확대) '民官協力'(PPP)⁸⁾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참여와 역량 활용을 극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8) OECD의 정의에 따르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란 “병원, 학교, 감옥, 도로, 다리, 터널, 철도, 식수, 위생시설 등 정부가 제공해왔던 인프라 자산과 서비스를 민간 영역이 제공하는 제도”

- 민간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민관협력(PPP) 프로그램을 도로, 교량 등 SOC 중심에서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장
 -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재원조달의 차원을 벗어나, 공공사업의 기획,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 쏠분야에서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장기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1990년대 영국에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민관협력(PPP)이 적용되었으며, 현재 영국의 공공투자 중 10-13%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90년대에 세계적으로 2,500여개 7,500억불의 PPP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말에는 세계적으로 580억불, 아시아에서는 200억불 규모의 사업이 체결됨

< 연도별 지역별 PPP 투자 규모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자료 : 세계은행

-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지역금융지원법' 또는 '지역금융활성화지역'의 신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특구를 비롯한 지역사업에 투·융자하는 금융기관에 지점 신설이나 인허가, 공공자금 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칭)'지역금융지원법'의 제정을 검토
 - 오래된 지방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자금을 (가칭)'지역금융지원법' 또는 (가칭)'지역금융활성화지역' 지원 제도에 의거하여 조달하도록 지원하며, 뉴욕 할렘街의 재개발 성공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지정하는 (가칭) '지역금융활성화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지방세 감면, 공공자금 유치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재투자법(CRA)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음
- 미국의 주택저당이나 주택개선과 관련된 CRA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소규모사업이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CRA대출의 수익성은 다른 대출과 동일함. 일본의 집권 민주당에서도 집권 이후 다시 '지역금융원활화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법(CRA)⁹⁾과 BDD¹⁰⁾에 의한 지역금융 활성화 사례¹¹⁾ >

- 뉴욕주는 금융소외지역을 금융활성화구역(BDD)으로 지정, 재개발을 지원
- 2009년 8월 현재 할렘街를 포함하여 뉴욕주 38개 지역이 BDD로 지정
- 뉴욕市 25개, 버팔로市 4개, 기타 지역 9개
- 2001년 빌 클린턴 前대통령 은퇴 후 사무실을 할렘街에 마련
- 1995년 이후 10년이 지난 2005년 할렘街의 부동산 가격 10배 상승

< CRA 관련 여신의 수익성에 대한 조사대상 은행의 답변 결과 >

구분		수익성 좋음/있음	수입=비용	적자
주택저당	전체 여신	94%	4%	2%
	CRA관련 여신	82%	3%	15%
주택개선	전체 여신	94%	2%	4%
	CRA관련 여신	86%	4%	10%
소규모사업	전체 여신	96%	2%	2%
	CRA관련 여신	96%	2%	2%
지역개발	전체 여신	93%	4%	3%
	CRA관련 여신	93%	4%	3%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RB, "Report on the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of CRA-Related Lending", 2001 (이병운('금융동향', 2006 봄) 재인용)

9) 1977년 제정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 여기서 중·저소득층이란 지역내 중간 소득자의 80% 미만 계층을 말하며,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영세사업자들도 수혜대상에 포함. 자산이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모든 미국 은행들은 대출, 투자, 서비스 등 3개 업무영역에서 수십가지 항목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일반에 공개해야 함

10) 'Banking Development District'. 1998년, 은행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약80만명의 뉴욕시민, 소수자의 약1/4, 미국인의 약9.5%에게 예금, 송금, 모기지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금융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BDD에 지점이나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한 은행에 공공자금 예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11) 머니투데이, 2005년11월28일자 '10년새 땅값 10배 상승, 할렘의 기적' 기사를 참고

○ (거점대학 육성) 지역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 지역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그 중에서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10위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지역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111 공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111 공정'¹²⁾ 사례 >

- 중국 정부는 2006년 9월 “세계100위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세계수준의 인재 1000명을 유치, 중국 100大 대학에 배치하여 그곳을 각 지방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111공정’을 발표
- 100大 대학을 지역별, 권역별로 2~3개 선정하여 연구 및 인재육성 역량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전략
- 최근 발표된 중국 100大 대학 순위 중 우한대학(8위), 지린대학(9위), 쓰촨대학(12위), 하얼빈공업대학(13위) 등 지방대학들이 상위권에 위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할 지역거점대학과 관련 센터를 선정한 바 있으나, 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의 설정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동 열(3669-4112, dykim@hri.co.kr)

연구원 전 선 형(3669-4131, shjeon@hri.co.kr)

12) 영남일보 2007년9월21일자 칼럼(전정기, ‘지역거점대학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에서 인용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2.2	-2.7
EU	2.7	0.7	0.7	-0.3	-0.4	-1.9	-2.5	-0.1	0.4	-4.2
일본	2.3	-0.7	5.6	-8.1	-4.0	-10.2	-11.9	2.7	1.3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9	0.2

주 1) : 2008, 2009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월15일	1월22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74	3.59	-0.15%p
	엔/달러	90.80	96.33	92.93	90.80	90.23	-0.57¥
	달러/유로	1.3992	1.4039	1.4332	1.4357	1.4073	-0.0284\$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711	10,390	-321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908	10,868	-4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22	4.24	0.02%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23.0	1,151.0	-28.0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701.8	1,684.4	-17.4p

주 : 1월 22일 해외 지표는 전일(1월 21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월15일	1월22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9.35	75.92	-3.43\$
	Dubai	36.45	71.85	78.06	78.45	75.96	-2.49\$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84.43	277.10	-7.3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